

# 인사는 현 대통령이 행사...당선인 국가원수급 대우

취임까지 두달간 신·구권력 공존

### 인수위원장 총괄 정부조직개편안 양측 소통 원활 이뤄질지 관심사 사면 현직 권한...상의할 일 아냐

3·9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함께 존재하는 기간이 시작됐다. 특히 5년 전 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 직후 취임해 권력 이양기가 없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은 10년 만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고 취임하기까지 두 달여 기간 동안 신·구권력

이 공존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자기 권력인 만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당장 경호부터가 그렇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을 최종 확정하면 경호 업무가 경찰청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넘어간다. 그 수준도 국가원수로서의 경호로 격상된다.

그래도 당선인은 '아직 당선인'이다.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뿐 여전히 현직 대통령 권한이 우선이고 유지된다. 문 대통령 임기는 오는 5월9일 밤 12시까지다. 청와대는 '말년 없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끝까지 할 일은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눈길에 미치는 인사 권한부터 문 대통령이 계속 행사한다.

다만 사실상 차기 정부와 일을 함께 할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물론 당선인 측과의 사전협의가 진행

될 전망이다. 일에 대한 전문성 유무를 따져보는 것은 기본이고, 차기 정부가 거부감을 가질 만한 사람일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인수위원장을 선정하는데, 인수위원장이 총괄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한 양측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지난 2008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허무는 개편안인 만큼 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돼 오히려 관련 법안을 서명·공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외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대통령 임

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사면 여부 또한 관심사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적으로 대선 이후 자신의 임기 내 마지막 사면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 또한 임기 종료 전 마지막 사면을 20대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를 통해 단행할 것이라 관측이 높다. 다만 사면 또한 현직 대통령의 특별권한이라는 점에서 당선인 측과 반드시 상의해야 할 일은 아니다.

당선인과의 협의를 통해 사면을 단행한 대표적인 사례는 김영삼 대통령 때이다. 김 대통령은 1997년 12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을 사면했다. 이는 김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뜻을 밝히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사면했고 올해 3·1절 계기 특사는 단행하지 않았다. 이는 3·9 대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이 고려됐던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보수·진보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균형',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사면 단행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편 외교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현직 대통령이 맡는다. 다만 지금과 같은 정권 이양기에 외국 정상 등 외빈의 한국 방문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과 당선인을 연이어 만나느라 지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로나 확진자 투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코로나 19 확진자들을 위한 투표가 시작된 오후 6시에 광주 북구 용봉제4투표소에 확진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靑경호처, 당선인 경호 전담팀 편성 방탄·호위 차량 등 대통령 급 경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당선인에 대한 경호를 준비하고 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인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을 경호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고, 10일 투입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당선 확정시부터 당선인과 당선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경호 업무가 기존 경찰청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이관되며, 국가원수급에 준해 이뤄진다.

당선인은 청와대 경호처 소속 근접 경호 요원으로부터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게 되며, 폭발물 검측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대통령 전용차와 같은 수준의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 및 호위 차량, 청와대 경호처 소속 운전 기사도 당선인 측에 제공될 예정이다. 당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 신호 통제 등을 포함한 경찰의 교통관리도 지원된다.

당선인이 해외 방문 등 필요할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경호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인의 업무 수행시 필요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과 배우자의 국·공립병원 진료도 무료로 제공된다. 민간 의료기관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마지막 유세까지 안 보인 김혜경·김건희

### 양강 후보 부인, 대국민사과 초유의 '배우자 리스크'

제20대 대선은 과거 대선과 달리 양 강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배우자 없는 대선'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당락의 결정에 따라 향후 당선인 배우자로 공개 활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

건희씨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부부가 함께 투표하는 모습도 이번 대선에서는 볼 수 없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배우자와 함께 투표에 나선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유력 여야 대선 후보들이 배우자와 함께 투표소를 찾지 않은 건 19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이다.

두 후보의 배우자들 모두 각종 의혹에 휩싸이는 등 선거과정에서 '배우자 리스크'가 터져나오면서 곤혹을 치른 만큼 선거 막판까지 차기 영부인으로 유

력한 배우자들이 은둔하는 전례 없는 일이 생겨난 것이다.

여론조사 공표 기한 마지막까지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층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배우자 리스크'에 대한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혜경씨는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시절 공무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받았고, 이에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국민 사과 이후 잠행을 이어갔다.

김건희씨는 지난해 12월 허위 경력 논란으로 인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기자와의 녹취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을 받으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선관위, 투표소서 투표지 훼손 선거인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 A씨를 9일 광주지방법원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광산구 비아동 제1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에 기표용구가 절반 밖에 찍히지 않아 무효표가 됐고 생각하고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기 위해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었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무효가 아

니며, 투표용지 수령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면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위법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상업부지, 땅**

**신안동,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투자**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多**

**매매 - 4400만원**

**제일오피스텔, 급매**

**수기동, 33평, 사무실 전용**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

**오피스텔 부지**

**대인동, 156평,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